

遊 學 精 神

金 容 駿
(高麗大 化學工學科)

지금 대통령 선거가 한창이다. 내 평생에 이런 대통령 선거를 처음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마음에 호뭇하다. 물론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디 완전한 것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지난 여름 미국의 모 대학을 방문했을 때 어느 미국인 교수와의 대담이 생각난다. 그 미국인 교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양상이 한없이 부럽기만 한데 미국의 지성들은 여전히 불만이 가득하다. 그러니 작금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풍경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맘은 호뭇하다. 그것은 내가 70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 차례 경험한 대통령 선거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 선거만큼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허용된 선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공포 분위기는 없지 않은가. 과거의 대통령 선거가 어디 선거라고 말할 수 있었던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나의 마음은 호뭇하기만 하다.

지난 10월 21일에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과 기초과학의 역할'이라는 과제를 내걸고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이 심포지엄은 전국자연과학대학장 협의회 및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 연합회가 주최하는 모임이었다. 나는 이 심포지엄에서 "불확실성의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과학기술은 세 개의 각각 다른 별도의 개념들이다. 과학이란 본래가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적 상상력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기술이란 생물의 생존본능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기술은 위에서 설명한 과학과 기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오늘의 과학기술이란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구성된 뉴턴의 패러다임이 그 바탕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오늘의 과학기술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환경을 뒤흔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뒤흔달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환경 파괴요 인간소의 현상이다.

5·16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5·16 이후의 역대 군사정권이 펼쳐온 과학기술정책이란 한마디로 뒤흔치는 오늘의 과학기술의 특징을 그대로 계승하는 형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비유해서 말한다면 특수임무를 띤 돌격부대의 조직에만 집중적으로 힘을 쏟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과학기술처 산하에 준비하게 설치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다. 서울의 홍릉 연구단지가 그렇고 대덕 연구학원도시가 그렇다. 따라서 특수임무를 띤 돌격부대란 때로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과거 30여 년간 정부가 수립하고 실천했다는 과학기술정책이란 주로 이와 같은 특수기관의 설치에 멈추고 있었다는 평을 던지기 어렵다. 그런데 특수임무를 띤 특수부대란 후방에 튼튼한 예비병력이 충분할 때 비로소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다. 과거 한 세대에 걸친 과학기술정책은 후방의 예비병력 비축에는 힘을 쏟을 여유가 없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물결은 참으로 비참할 정도이다.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고려대학교 자연계의 시설이란 이웃 일본의 어느 벽지에 자리잡고 있는 전문대학의 시설만도 못하다. 하물며 수많은 다른 대학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고급연구인력의 80퍼센트 가까운 숫자가 대학에 몸담고 있다. 이 고급인력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다. 대덕 연구단지의 모델이 일본의 쓰꾸바 연구단지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는 대학이 넘쳐흘러서 이룩된 연구단지다. 한국의 경우는 그 순서가 전혀 뒤바뀐 것이다. 88올림픽의 개가를 올리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태릉 운동선수촌의 발상은 체육선수 양성에는 효력을 발휘했는지 모르지만, 과학임국은 홍릉·대덕 연구단지와 같은 선수촌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새로운 페르다임이 들이닥칠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그야말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 자리에는 현재의 3대 정당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는 책임자급의 인사들도 참석하고 있었다. 또 정당의 앞으로 과학기술계에 포상제도를 늘리겠다는 정책도 눈에 띄었다. 올림픽의 금메달에 대한 포상제도를 연상시키는 발상이라고 생각되었다. 전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발상에서 비롯된 정책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대학의 전일제까지 들고 나왔다. 대학을 무슨 강습소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지난 10월 14일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학과장회의에서 '93년도에 입학정원을 280명 증원한다는 정부의 처사에 반기를 들었다. 증원을 반납하겠다고 결의를 한 것이다. 나는 근리에 드문 쾨거라고 생각하였다. 교수의 증원요구는 목살하고 학생수만 늘리자는 당국에 대한 항의라고 생각된다.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이라는 『大學』의 첫 구절이 생각난다. 대학이란明德을 밝히는 데 있고 나아가서 민중을 새롭게 하며 至善에 머문다는 뜻이다. 과거 한 세대 동안에 정부가 펼쳐온 과학기술정책을 주로 논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견해는 비단 과학기술에 한하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한 나라의 앞날은 그 나라의 대학이 살아있을 때에 비로소 밝아온다고 생각한다. 대학이란 오늘날의 비극된 과학기술의 담달만 가지고는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없다. 튼튼한 후방부대의 예비병력이란 한 나라에 있어서 대학에 다름아니다. 대학은 고지점령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돌격부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大學은 悠悠自適 學問을 노니는 곳이 되어야만 한다. 그곳에서 대학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대학의 遊學精神을 제창하는 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학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나는 이 나라의 밝은 未來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나라의 밝은 미래는 대학의 활성화에 있다. 새로 들어설 새 정부에게 大學教育政策의 근본적인 刷新을 당부하고 싶다. ▣